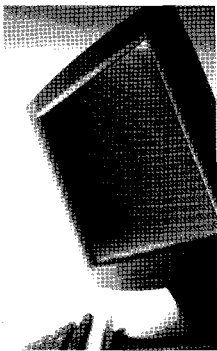




— **경영가이드** [www.kcca.or.kr](http://www.kcca.or.kr)



- 미래 준비 기업이 장수기업된다
- 암벽등반과 기업가정신
- '중소기업의 녹색화' 를 본격적으로
-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 중소기업은 고용확대의 원천
- 기업상속세제의 개선 방향

## 미래 준비 기업이 장수기업된다

중소기업 경영자를 만나면 표정 속에 그 기업의 살림살이가 보이는 것 같다. 2009년 상반기는 중소기업에게 앞이 안 보이는 고난의 시기로 중소기업인을 만나면 인사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올 7월을 넘기면서 만나는 중소기업인의 표정이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기업이 어려우니 직장인들도 어려운 한 해였다. 얼마나 살기 어려웠으면 직장인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먹고사는 것을 걱정 한다' (口腹之累)였겠는가?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중소기업 경영자와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 반드시 배우는 것이 있어야 과거 보다 미래가 더 나아진다.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기업에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 배부른 소리라고 면박을 받을 것 같다. 1950년대, 1960년대를 살아 온 한국 사람들은 이미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어머니들이 했던 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저축이었다.

### • 내년 경제전망 불투명

먹고 살기 어려운데 저축할 돈이 어디 있겠는가? 아침, 저녁 밥에 들어갈 쌀을 한 줌 덜어 내어 부뚜막 저금통인 항아리에 넣고 보리를 더 넣어 밥을 지었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부뚜막 항아리에 쌓인 쌀이 한 되박이 된다. 이를 팔아 각 가정이 저축할 돈을 마련하고 이를 함께 모으면 목돈이 되었다. 이 역할의 리더십을 만들어 낸 것이 새마을금고 부녀회였고, 이런 목돈 덕택에 학비를 조달하여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50대와 60대 분들이 있을 것이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저축할 돈이 없을 때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저축을 했던 한국의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중소기업인들도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미래를 준비하는 결심을 더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2010년이 지나 봐야 미래 경제 방향이 예측될 것 같다는 것이 지배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긍정적 요인을 보면 2009년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분기 마다 수정되어 애초 최악의 시나리오인 -2.2%에서 -0.2%로까지 바뀌고 있다. 더구나 2010년 한국경제 성장 전망치에서 국내 유명 연구소들은 4~5%이고, 해외 유명투자은행들의 예측치 평균이 4.9%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 세계경제 호황기 시절인 2007년 한국경제성장률 5.0%를 상회할 가능성을 보여 준다. 반면 불안 요인도 있다. 매출액 상위 600대 한국 대기업 경영자들의 75.7% 이상이 2010년에 세계경제의 더블 딥 '단기적인 불황국면 진입기간' 가능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

### • 中企 자립에 매진해야

2010년 상반기 경제전망이 불투명하므로, 출구전략의 시행 시기는 내년 7월 이후 하반기로 잡고 있다. 그러나 이미 2010년 정부 예산에는 출구전략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재정적자를 편성하여 경기부양을 했던 올해 예산과 달리 내년 예산 규모는 크게 축소된다. 특히 유동성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자금애로요인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사업 예산은 5.8조원에서 3.1조원으로 46.5%로 급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규모가 68조에서 66조로 감소되고, 그 규모 축소는 앞으로 더 가속화 될 것이다. 깊은 불황을 호전시키려는 정부의 역할은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 기능으로 복귀하고 있어 중소기업도 자

립적인 지속적 경쟁력 개척과 축적으로 더 매진해 나가야 한다.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을 보면,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경쟁심화, 환율요인 등이 70%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 혁신을 해 나가는 것이다. 2009년 경제상황이 아주 어려웠지만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이 늘어난 기업들이 바로 세계시장에서 1~4위하는 기업들이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1~2년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업가정신을 갖춘 기업가라면 누가 못하겠는가? 7년~20년을 투자하여 품질을 최고로 만들고 시장을 개척해야 하므로, 이러한 고난의 기간 동안 불경기도 만나고 호경기도 만나게 된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를 계속하여 장수기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종욱 | 서울여대 교수  
제 1765호 2009년12월23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 암벽등반과 기업가정신

2010년 새해가 밝았다. 밝은 해가 솟았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색다른 다짐을 하면 매일 떠오르는 해라도 다르게 보이는 법이다. 지난해는 참으로 힘들었다. 하지만 어디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있었던가. 다사다난은 바로 우리의 삶 그 자체다. 그런 속에 흥망(興亡)이 있다. 새싹은 겨우내 움츠려 있지 않고 봄을 준비하다 얼음을 뚫고 솟아나는 법이다. 지난해는 IMF외환위기 때를 연상하듯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아 한국경제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이너스 성장은 면했다. 예측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10년 성장률은 5%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전망은 전망일 뿐 그대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경기가 풀린다는 징조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축대는 얼음이 녹을 때 무너질 수 있다. 위기는 끝나지 않고 다시 침체될 것이라는, 이른바 더블딥(이중 침체)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과연 무엇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을 지속할 것인가. 막연히 경기회복과 성장률 수치를 기대하고 있을 수는 없다. 2010년은 호랑이 해다. 해가 바뀔 때마다 상징동물로 한 해를 점치는 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이다. 호랑이는 목표물을 향해 집중력을 발산한다. 호랑이의 강인한 기세를 받아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를 만들어보자.

### • 위험 감수해야 도약 가능

위기는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다. 도약에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핵심역량을 만들고 키울 것인가. 경제를 이끌어갈 엔진은 바로 기업가정신이다. 황무지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 기업가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경제는 이 정도 성장했다. 다시 도약하려면 위축된 기업가정신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환경 탓만 할 게 아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어떤 난관도 이겨낼 만큼의 강인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에 매달리고 기회가 올 때 뛰어 올라야 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생(寄生)을 거부하며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것이 진짜 기업가정신이다. 장사꾼은 돈만 벌려고 한다. 기업가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일을 만들고 돈도 벌려고 노력한다.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을 강조해야 하는 까닭이다.

### • 겁없이 도전하는 해 되길

기업경영을 암벽 등반에 비유하기도 한다. 암벽을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려면 몸을 날려 조금 멀리 있는 홀드를 손으로 잡아야 한다. 성공하면 정상에 오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큰 사고가 난다. 기업가들에게 그런 모험을 감수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기업에 혼신의 힘을 쏟으라는 주문이 아닌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큰 위험을 감수했다. 창업하려는 데도 걸림돌이 많다는 걸 보더라도 중소기업이 당면하는 어려움은 한둘이 아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환경은 세계 53위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남의 탓,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다. 인재 구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 “나로 인해 기업과 세상이 변한다”는 보람을 갖도록 조직을 바꾸어보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내려면 엉뚱한 발상도 필요하다. 실패를 처벌하는 문화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 2010년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부터 다지자. 도전해야한다. 스포츠 세계에서 신인들이 ‘별 중의 별’로 떠오르는 경우는 흔하다. 겁 없이 도전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살길은 도전에 있다. 적당히 안주하려하면 결국 사라진다. 경쟁자들이 뛰어들기 때문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 당한다. 일에 미쳐야한다. 미치지 않으면(不狂) 미치지 못한다(不及). 새해 벽두부터 어둠을 헤치면서 다시 뛰자. 암벽등반 하듯 남다른 각오로 올 한 해 후회 없이 뛰어보자.

류동길 | 숭실대 명예교수 · 경제학  
제 1766호 2010년01월01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 ‘중소기업의 녹색화’를 본격적으로

22010년, 경인년에는 녹색바람이 거세게 불 것 같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끝났지만 녹색성장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가 확고히 마련됐고, 선진국들이 고강도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제창한 ‘나부터’ (me first) 정신에 입각해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별도 추가대책이 없을 경우의 배출전망치(BAU) 8억1,300만톤보다 30% 줄인 5억6,900만톤(탄소환산)이하로 묶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지난 연말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그중에서도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시책이 강도 높게 시행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올 하반기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이 안에는 부문별·업종별 목표가 제시되고 구체적인 스케줄도 포함될 것이다. 이에 더해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통계시스템도 구축된다.

### •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시책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 올해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2009년 대비 3%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38개 대기업들은 이미 작년에 정부와 ‘에너지 목표관리제’ 사업협약을 체결했고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에 돌입했다. 이들 기업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산업 전체 소비량의 41%를 차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3년간 150만톤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정혁신과 녹색기술의 개발면에서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유망 녹색기술산업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거나 진출을 서두르고 있으며 세계시장을 향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 쪽이다. 일부 앞선 기업을 예외로 하고는 녹색성장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대한상의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 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6.3%만이 환경문제 전담 조직을 갖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기계·철강 등 주력산업 관련 에너지 다소비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환경관리능력의 부족, 기술·비용 장벽 등으로 그린화 추진에 엄청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공정·제품·공장의 녹색화**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들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년 8월 ‘중소기업 녹색성장 확산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2013년까지 녹색산업분야 기술선도기업으로 1,000개를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태양광 발전·그린IT 등 8개 산업, 50개 전략제품, 117종 혁신부품·소재·기술을 중심으로 녹색전문 중소기업 육성에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녹색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하루가 급하다고 하겠다. 이 이상으로 더 다급한 것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중소기업들의 에너지 다소비형 생산공정을 뜯어고치는 일이다. 저탄소·고에너지효율·친환경공정을 확립하는 공정의 녹색화와 제품의 녹색화 및 공장의 녹색화가 달성되

지 않고서는 환경규제의 강화 등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녹색경쟁시대에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기청이 녹색경영의 제1단계로 그린팩토리(Green Factory)운동을 제창한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보여진다. 조만간 예산의 뒷받침을 받은 구체적 추진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그린화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시책 못지않게 중소기업인 스스로의 자각과 생존을 위한 지구대책이 필요하다. 어차피 온실가스 감축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대세라면 하루라도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환경규제가 날로 높아지는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일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인 것이다. 중소기업의 자조노력과 정부의 지원시책이 호흡을 맞추어 녹색강국의 실현을 앞당기길 기대해 본다. 백색호랑이 해가 중소기업의 그린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원년이 되길 바란다.

최용호 | (사)산학연구원 이사장  
제 1765호 2010년01월13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우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는 회복되는 듯이 보이지만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14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가시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리 단순해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 환율은 하락하고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은 상

승해 우리 경제에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의 수출비중이 높고 원자재 및 원유는 수입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생산비의 상승을 초래하고, 환율의 하락은 제조업의 수출단가를 높여 우리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어 일자리 창출에 적신호로 여겨진다. 이러한 국제 원유 및 원자재시장의 동향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또한 환율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경향이 있다. 다만 우리 경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억제하고 해외 투자를 촉진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만일 경상수지 흑자를 상쇄하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외화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시중의 통화량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의 우려가 높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 하락속도의 완급은 정부가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또 다른 문제점은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대기업이 주도해왔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대기업이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의 고용창출능력은 그리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 • 서민대출만으론 한계

주요 대기업들은 신규 인력 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다소 증가시킨다 해도 정부가 목표로 하는 14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수는 없다. 14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나서야 한다. 그러나 고용창출의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경기는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 고용창출에 나서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하데, 정부는 출구전략을 거론하며 중소기업 지원예산에 대한 감축

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예산투입은 주저하고 있다. 물론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는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중소기업들 중 글로벌 시대에 적합하게 국제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 • 中企부문 지원 늘려야

즉, 일자리 창출에 앞서 기업의 존폐상황에 놓인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부문에 어느 정도 예산투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얼마 전 어느 신문에 우리나라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투입을 많이 하지 않는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정부가 말하는 14만개의 일자리는 중소기업분야에서 창출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들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후원에서 예산을 비롯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부족한 일자리에 대한 대책으로 ‘미소금융’과 같은 서민금융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대책은 임시방편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자본으로 사업에 성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임대료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민에 대한 소액대출만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는 없다. 서민을 위한 진짜 대책은 그들이 포화상태에 있는 자영업자가 아닌 임금노동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지원, 특히 그들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R&D분

아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은 고용의 12%가 아닌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정남기 |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제 1768호 2010년01월20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 중소기업은 고용확대의 원천

최근 들어 세계경제가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며, 무엇보다 이와 같은 경제회복의 명암이 심각할 정도로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라 할 것이다. 한국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대기업들이 한국경제의 자본집약화, 소프트화에 따라 제조에서 조립으로의 경영전략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다보니 투자 역시 자동화, 정보화에 의한 모듈형 체제로 전환되면서 고용기회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 고용시장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성 악화와 더불어 원화가치의 절상으로 인한 원가압력 증가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갈수록 그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이와 같은 열악한 중소기업의 환경으로 인하여 우수인력들조차 그 불투명한 전망과 사회적 인지도의 저하에 따른 취업기피로 수급자체가 공허 문제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노력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중소기업들의 설자리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수

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지원을 위한 단기 인턴학생사원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고는 있지만 이들 인력이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성과를 가져올지는 정말 미지수라 할 것이다.

### • 시혜성 中企지원 탈피

인턴학생들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출후보 상품과 글로벌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더불어 열정어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전세계 수입업자들에게 이 메일이나 웹 사이트를 통한 수출마케팅을 위해서는 성과지향적인 노력과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같이 이러한 고용지원 정책 역시 형식적인 인원 지원에 그쳐 지원기간이 끝나면 성과없는 학생과 중소기업의 밀월관계 역시 끝나기 마련이다. 여기에 '시혜성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함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연전에 원자재가의 급속한 상승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몰리면서 국회에서 이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그 당시, 대기업을 대변하기 위해 나선 전경련의 한 전문가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원자재가 연동제를 강화할 경우, 수출가격의 채산성 유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원가를 덜어주는 대신에 글로벌 아웃소싱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일종의 애국심같은 감정으로 생존의 기로에 몰린 중소기업들을 외면하고 글로벌 아웃소싱, 운운하는 대기업들의 횡포에 심각한 도전 의식을 느낀 바 있었다.

### • 경쟁력 향상 정책되어야

그러나 기실 이와 같은 대기업들의 항변 역시 단순히 중소기업 지원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항변

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대기업 들 역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용과 같은 관리가격의 탄력적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불만을 그대로 끌어안을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역시 중소기업을 위한 시혜성 지원정책의 함정이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게된다.분명히 한국경제의 99%는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88%가 고용을 차지하는 한국경제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기응변식의 정부지원이아말로 한계상황에 몰린 중소기업을 단기간 면명하게 함으로써 그 부담을 국민 경제 전체에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데에 있다. 그동안 여러 번의 투고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이 보다 현장 및 성과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역설한 바 있거니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경쟁력 배양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환율인하나 원자재과동으로 인한 원가압력이 발생할 시, 이와 같은 원가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글로벌 경제에서 인정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원인을 무시한 증상치료에 불과한 시책일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 아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한 보다 혁신적인 정책의 전환을 기대한다. 무한한 고용 창출의 원동력이며, 한국 경제의 풀뿌리 자본주의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해본다.

최용록 | 인하대 교수  
제 1769호 2010년01월27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 기업상속세제의 개선 방향

정부·여당은 2007년, 2008년 말 두 차례에 걸쳐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했다. 개정의 주된 목적은 기업의 안정적 승계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대한 기대에 있었다. 개정 상속·증여세법은 중소기업 기업상속에 대해 사업영위 기간에 따라 재산가액의 최대 40%(100억원 한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승계공제 대상 요건이 되는 사업영위기간을 10년으로 완화했다. 또한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기한을 상속세 신고기한 후 2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같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추세와 주요국의 상속과세제도 개정 등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계는 기업의 승계와 관련된 상속과세의 과중한 부담을 호소해 왔다. 상속과세의 과중한 부담 호소는 사업자의 재산 대부분이 사업용 자산으로 구성돼 현금유동성이 상당히 낮은(rich assets poor cash) 기업경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개정 상속세법에 의한 기업승계관련 상속·증여세 경감 효과는 개정 전에 비해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최고 67%, 최저 34%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정 상속·증여세법은 종전에 비해 매우 발전된 모습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계관련 세제애로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 규모 커질수록 애로 커

더 큰 문제는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감면효과가 감소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창 성



장 중인 중규모 이상의 기업 측면에서는 상속·증여세 감면 효과를 체감하고, 안정적 승계를 위한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한계가 있다. 개정 상속·증여세법을 기초로 하여 승계를 앞두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주요국 기업가의 상속세 부담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이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세 규모가 독일의 3배, 프랑스의 4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중소기업가들은 독일·프랑스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한 상속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중한 상속관련 조세 부담은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는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 장기간 기업에 재투자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소유 자산이 대부분 사업용 자산으로 구성돼 소유자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현금자산의 비중이 적은 결과를 발생시킨 결과이다.

#### • 기업승계 부담 없애야

일본은 특정 기업의 고용유지 및 사업지속성을 요건으로 하여 상속관련 세부담 경감률을 종전 10%에서 80%로 대폭 확대했다. 독일 또한 최근 사업용 자산의 승계에 대한 세제 즉, 기업상속세제를 승계 친화적으로 대폭 개정했다. 사업용 자산의 상속에 대해 고용유지를 주된 조건으로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일본 등 최근 주요 경쟁 상대국의 상속세 등의 완화·폐지 움직임은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법·제도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기업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상

속과세제도의 두 가지 개선방향은 상속재산에 대해 사업용 재산과 비사업용 재산을 구분해 기업용 재산에 대해 우대 과세하는 방안과 기업의 존속 및 성장을 담보로 하여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다. 주요 경쟁국들은 상속과세제도를 기업의 지속적 성장 또는 기업경영의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개선하고 있다. 우리도 차제에 주요 경쟁국의 상속과세 입법 동향과 상속과세 제도에 상존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의 조세 인프라 실태를 감안하고, 개선의 기대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상속과세 개정 방안 마련을 기대한다.

신상철 | 중기연구원 경제분석실장  
제 1770호 2010년02월03일 발행 중소기업뉴스